

폭도 몰린 5·18 피해자 재심으로 누명 벗는다

법무부 직권 재심 청구기로 적폐청산 수사 상소권 행사 검찰에 '선거 전담반' 설치

법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과거사 진상규명 및 후속 조치와 관련, 과거사 재심 청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중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건 등을 점검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데도 재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5·18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 1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민주당 평창올림픽 '엄지 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원희룡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 평화 올림픽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른 재심은 당사자(가족)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폭도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검찰의 재심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누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안으로는, 피해자들이 재심 절차를 몰랐거나 부상 후 사망,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거사 국가 배상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관련,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배상금액 산정 관련 적정 내부 기준을

수립해 활용하고 무리한 상소는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엄정하게 구형을 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해 수사 결과도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5일 현재 28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사범 117명(41.6%) ▲거짓말 선거 37명(13.2%) ▲공무원 선거 개입 4명(1.4%) ▲여론조사 조작 2명(0.7%) ▲기타 121명(43.1%) 등이었다.

법무부는 지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수사팀에 대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다단계, 유사수신 이외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리와 처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자 노트

5명 모두가 1등 공신인데...



최권일 정치부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는 '격려성 발언'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발집 췌셔놓은 듯 시끄럽다.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 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통령 격려'발언이 단초를 제공했다. 둘 밖에 어느 누구도 모를 문 대통령과의 사적 발언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격려와 당부 말씀 등 덕담이 있었"다는 수준에 그쳤으면 됐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추가되면서 광주시장 입후보 예정자들을 자극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 논란'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 전 부위원장의 발언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대통령의 덕담 발언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 부위원장이 마치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가 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전략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다 본인의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고집어 낸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상대 입지자들은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발언이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 전 부위원장의 '대통령' 발언은 아권까지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하지만,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또 한번 상대 후보들에게 역공을 펼쳤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더 이상 광주 선거에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적선거를 제안했다.

본인의 발언으로 발단이 됐지만, 상대 후보들에게 사과하는 커닝 문 대통령을 악용한다는 역공 전략을 펴면서 자신은 정적에 '올인'하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시도했다. 이에 상대 후보들은 또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제는 이 전 부위원장의 '대통령' 발언에 발끈한 광주시장 입후보 예정자 모두가 문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점이다. 윤창현 광주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서 민주당을 굳건히 지켰고,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상황실장으로 활동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직접 발탁한 인물이다. 최영호 남구정장은 광주에서 반문(反文) 정서가 최고조에 달할 때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민행배 관산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일 당시 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 대선때는 정국 기획수상을 뒷받침하는 등 오랜 정통 친문인사로 꼽힌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한 후보에게만 지지를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후보자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 뛰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심(文心)'에 기대지 말고 광주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공약 등을 제시하며 페어플레이를 하길 바라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오랜만에 지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다. 문제를 야기시킨 이용섭후보가 사과하고 문제삼은 다섯 후보들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사건은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cki@kwangju.co.kr

성폭행 피해자의 모욕과 수난



김은영의 '그림 생각'

(215) #미투

서양 최초의 여성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1593~1652)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화가였던 아버지 오라치오 젠틸레스키는 딸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고 미술수련을 하게 했는데, 아버지의 동료이자 그녀에게 그림을 지도하던 아고스티노 타시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아버지는 소송을 걸었지만 타시는 아르테미시아가 먼저 유혹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였던 아르테미시아는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무명화가에게 팔려가다시피 결혼 후 피렌체로 이주해야 했다. 당시 피렌체 통치자 메디치 가문의

대공 코시모2세(1590~1621)는 은둔하고 있던 아르테미시아에게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라는 작품 제작을 의뢰한다. 그림이 완성되자 아르테미시아의 화실을 찾은 대공은 "아버지 숨씨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격려와 함께 추가로 작품을 주문했고 과거의 스캔들을 묻는 대신 여성화가로서의 재능을 인정한다.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와 더불어 아르테미시아의 명성을 높인 그림은 '수산나와 장로들'(1610년 작)이다. 구약성서 다니엘서에 나오는수산나는 빼어난 용모에 부유한 가정의 아녀였다. 존경받는 원로인 두 장로가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고 허락하지 않으면 외간남자와 간통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거짓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수산나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산나는 간통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때 후일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예언자가 된 다니엘이 두 장로에 대한 분리심문을 요청해 각기 다른



젠틸레스키 작 '수산나와 장로들'

증언을 이끌어냄으로써 수산나가 누명을 벗게 된다.

아르테미시아는 목욕하는 수산나에게 두 장로가 갑자기 들이닥쳐 위협하는 모습을 뛰어난 기교로 그렸는데, 그중 한 사람을 성폭행범 타시처럼 붉은 밤색 머리카락으로 묘사해 의미심장하다. 성폭행범과 진실을 다룬 이야기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분노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씁쓸하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정책기획실장>

민주, 병역법 위반·성범죄자 등 예비후보자 심사서 원천배제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후보 공천과 관련,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증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반영해 만든 초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초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했다. 성폭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징역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 등 강력범죄와 뺑소니 운전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무엇이든 윤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당 윤리위에서 제명된 자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제명 5년, 당원자격정지 3년 이내) ▲5년 내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